
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<b>보 도 참 고 자 료</b>			
	<b>보도</b>	<b>2022. 1. 25.(화) 조간</b>	<b>배포</b>	<b>2022. 1. 24.(월)</b>
<b>담당부서</b>	<b>연금감독실</b>	<b>권성훈 팀장(3145-5190), 오창훈 선임(3145-5185)</b>		

## **제목 : [금융꿀팁 200선] ⑫ 불가피하게 연금계좌(IRP, 연금저축)를 중도 인출할 경우,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세요**

-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(금융꿀팁)를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해 왔음
- ➔ 이에 125번째 금융꿀팁으로, “개인형 퇴직연금(이하 ‘IRP’)과 연금저축의 중도인출시 절세방법”에 대해 안내해 드림

◆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\*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, 연금저축은 제약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함

\*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, 개인회생·파산, 무주택자의 주택구입·전세보증금 등

- 일반적으로,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되나, 소득세법에서 정한 ‘부득이한 인출’은 저율의 연금소득세(3.3~5.5%)가 부과됨

➔ 따라서,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사유가 세법상 ‘부득이한 인출’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음

구 분	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
IRP	<b>1.</b> 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(연간 임금총액의 12.5% 초과) <b>2.</b> 개인회생·파산선고 <b>3.</b> 천재지변
연금저축	<b>1.</b>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<b>2.</b> 개인회생·파산선고 <b>3.</b> 천재지변 <b>4.</b> 연금가입자의 사망·해외이주 <b>5.</b>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·인가취소·파산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제 목	불가피하게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경우, 저율과세되는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세요
사 례	<p>① (사례 1 : 천재지변) 근로소득자인 A씨는 호우로 인해 본인 주택이 일부 붕괴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다. 피해 복구비 등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A씨는 본인이 가입했던 IRP와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하고 싶은데, 중도인출시 세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고민하고 있음</p> <p>☞ 일반적으로 연금계좌(IRP, 연금저축)를 중도인출하는 경우,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(납입원금)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(16.5%)*가 부과되나,</p> <p>* 인출금이 퇴직급여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</p> <p>호우·태풍·홍수·지진·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출은 소득세법상 ‘부득이한 인출’에 해당되어 인출금(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)에 대해 저율의 연금소득세(3.3~5.5%)*가 부과됨</p> <p>* 인출금이 퇴직급여인 경우에는 ‘퇴직소득세의 70%’를 연금소득세로 부과</p> <p>② (사례 2 : 3개월 요양) 근로소득자인 B씨는 질병으로 3개월간 요양을 하게 되었다. 요양비가 필요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찾던 중, 본인이 가입했던 IRP와 연금저축 중 하나를 인출하려고 하는데, 둘 중 어느것을 중도인출할지 고민하고 있음</p> <p>☞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세법에서 연금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비를 부득이한 인출로 보아 저율과세(연금소득세*)하므로, 위 사례2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함</p> <p>* 연금소득세 적용범위 = 의료비 + 간병인 비용 + (휴직월수×150만원) + 200만원</p> <p>반면, IRP는 『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』에서 중도인출 요건을 세법보다 엄격하게 제한(6개월 이상 요양 및 연간 총급여의 12.5%이상)하고 있으므로, 위 사례2에서 (일부)중도인출이 불가능*함</p> <p>* 전부해지는 가능하나, 이 경우 기타소득세(16.5%) 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</p> <p>※ 참고로, IRP 중도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총급여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, 6개월이상 요양 조건만 충족하면 인출이 가능</p>

**[중도인출] 연금 유지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인출을 해야 한다면, 소득세법상 '부득이한 인출'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고, IRP에 대해서는 『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』에서 정한 인출사유를 추가로 확인**

연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, 소득세법상 '부득이한 인출'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절세하는 것이 필요함

특히,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, IRP는 『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』(제24조)에서 정하는 (일부)중도인출 사유\* 외에는 중도인출을 금지(전부해지는 가능)하고 있으므로,

\*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, 개인회생·파산, 천재지변·사회적재난(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), 무주택자의 주택구입·전세보증금 등

IRP 가입자는 자신의 인출사유가 『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』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

**꿀 팁**

또한, 다른 부득이한 인출사유와 달리,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\*,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

\* 연금소득세 적용범위 = 의료비 + 간병인 비용 + (휴직월수×150만원) + 200만원

< 연금계좌의 중도인출사유 및 적용 세율 >

구 분 (소득세법 시행령 §20조의2①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§24)	IRP 중도인출	연금저축 중도인출	중도인출시 적용 세율	
			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	퇴직급여
<b>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</b> (연간 임금총액의 12.5% 초과시)	○	○	연금소득세 (3.3~5.5%)	연금소득세 (퇴직소득세의 70%)
개인회생·파산선고	○	○		
천재지변	○	○		
가입자 사망·해외이주	X	○		
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	X	○		
연금사업자 영업정지· 인가취소·파산	X	○	기타소득세 (16.5%)	퇴직소득세
무주택자 주택구입· 전세보증금	○	○		
사회적 재난 (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)	○	○		
그 외의 사유	X (전부 해지는 가능)	○		

동 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금세제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.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